

‘고유가 뚫어라’ 모토 시리즈 ㉑

사상초유 고유가 에너지위기 ‘속수무책’ 안된다

재경부 “고유가 부담 민간흡수 불가피” 제기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필요

고공행진 “가을까지” “2~3년 걸린다” 주장도

고착화에 대응 경제체질 강화 기회로 삼아야

경상수지 축소 정부 경제운용 기조에도 비상

산업계 원화강세 겹쳐 원자재가격 상승 고초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초고유가 시대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지금과 같은 고유가가 앞으로 2~3년은 더 갈 것이다” 고 최근 보드먼 미국 에너지장관이 전망했다. 보드먼 장관은 이달 초 미 NBC 방송에 출연, 고유가의 원인은 공급자들이 시장 통제력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인도, 미국으로부터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공급자들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황까지는 2~3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초고유가가 고착화 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자 미국도 초고유가를 잡기위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부시 대통령이 나서 비축유를 대폭 줄이고 방출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놨다. 부시의 발표로 한때 국제유가는 잠시

하락세로 반전하기도 했다. 여기에도 공화당은 고유가 대책으로 올 여름까지 1인당 총소득이 14만6000달러, 부부소득이 21만9000달러 이하인 약 1억명에게 기름값 보조금으로 100달러 짜리 수표를 보낼 계획이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부자나라인데도 미국 테네시주 동부 레이크카운티의 각급 학교의 경우 고유가로 인한 스쿨버스 기름 값 부담 때문에 연일 휴교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 전문가들은 고유가의 원인에 대해 이란의 핵 문제라는 ‘일시적’ 요인뿐 아니라 전 세계 석유 수급 사정의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인도의 석유 소비량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은 공급 차질에 수요 폭증이 겹치면서

고유가 행진은 최소한 올 가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일치된 분석이다.

한국 환율하락 겹쳐 무역흑자 '빨간불'

이로 인해 국제유가 급등과 원화 강세로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무역흑자 목표인 230억 달러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유가 급등과 환율하락으로 무역 흑자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달 수출이 257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늘어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수입은 24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이 늘다보니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줄어들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5억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000만 달러나 줄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역흑자는 34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만 4,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무역 흑자 230억 달러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유가전망치 53달러 훌쩍 넘어

특히 원유가는 당초 정부 전망치인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53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67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무역흑자를 깎아먹고 있다. 원화 값이 오르면서 일본산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재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무역흑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유가급등이나 원화강세 모두 대외적 요인이 문제인 만큼 정부로서도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에도 '에너지위기 불감증'은 위험수위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형식적 대책'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가격 현실화'가

근본 대안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최근 이런 핵문제 등으로 불거진 사상 초유의 고유가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국내 사정은 별반 다른 것을 느낄 수 없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고유가 대책' 실효성 없어 위기 불감증

연일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반이 느끼는 분위기는 평소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에너지산업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고유가가 앞으로 상당기간 고착화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석유 사용량 세계 6위이며 수입량 4위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위기 불감증의 원인으로 정부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정부 전망치인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53달러보다도 무려 10달러 이상이나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데도 '강 너머 불구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대응소이할 뿐 아니라 그런 대책들이 현실 속에서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 역시 범국민적 실천 운동 같은 자율적 운동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가



급등이 대외적 요인이지만 정부로서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민간에 유가변화 합리적 대응” 주문

이 같은 지적에 최근 재정경제부가 고유가 부담은 민간이 흡수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우리 경제는 선진국에 비해 석유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서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될수록 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간이 유가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해 고유가 부담을 흡수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산유국과 소비국간 대화채널 강화·해외자원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경기 회복세와 세계경기 호조에 따라 당초 전망한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경기 회복세와 고유가로 인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실토했다.

IMF 아태경제 위험 인정 속 성장률 상향

여기에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경제의 ‘삼각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인도, 일본의 경제가 활황세를 타고 있어 초고유가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 경제성장률도 상향조정론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6.9%에서 7%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IM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호주 경제의 회복세,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 경제의 꾸준한 성장이 아시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유가, 통화 긴축 기조,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가능성, 세계 무역 불균형 등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정책 방향과 관련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회복되고 있는 내수를 해치지 않으면서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아시아 정부에 대해서는 부채를 줄이면서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고, 내수 부양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중소제조업 업황전망 어두워

고유가의 파고로 중기 경기 ‘더딘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기전망 조사에서 업황전망이 ‘97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업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5월중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5월중 중소기업 업황전망 SBHI는 97.0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됐다.

SBH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보다 조사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 산출해 낸 지수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전월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더 많음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제조업의 SBHI는 94.4에 그쳐 부진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벤처기업은 SBHI가 114.1로 나타나 업황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4월 중 경영상 애로요인(복수응답)으로 내수부진(53.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업체 간 과당경쟁(43.9%), 제품단가 하락(35.7%),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35.3%)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집계됐다.

거시경제 낙관-비관 엇갈려

금융연구원은 최근 '고유가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원유 의존도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적응력도 과거에 비해 향상됐다"며 "주요 수출산업의 원유 의존도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비교적 낙관적인 분석을 내놨다.

LG경제연구원도 세계경제의 높은 성장세를 전제로 유가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경기가 둔화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역시 낙관론 쪽이다.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유가불안의 핵심요인인 이란 핵문제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환율 변수에도 올해 2분기 이후 최소 전분기 대비 1%의 성장은 이어지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예상했다. 중국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쳤지만 이에 대해서도 중국 경기과열을 사전에 막는다는 의미가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파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유가, 환율 등 불안요인의 파급력을 높게 보는 한편 대외경기에 대해서도 향후 호조세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2006년과 2007년 4.5%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소비가 부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4.5% 성장은 정부가 예상하는 5% 성장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그는 미국 소비둔화가 우리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세계경제가 지난 97년 같은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성장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분석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은 "현

상황은 성장을 하더라도 상충투성이인 채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유가나 환율 등의 변수로 우리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나마 소비회복세가 대외불안 요인을 상쇄한 점을 감안해도 올해 성장률은 4.5%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 각국 잇단 석유국유화 새 변수

이란 핵 문제에도 중남미 에너지 강국들의 연이은 자원 국유화 움직임도 앞으로 수년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 정부가 이달 1일 국내 천연가스 및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전국의 천연가스 및 유전지대에 군대를 투입해 '통제권 접수'를 선언했다.

따라서 앞으로 볼리비아 내 에너지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모두 볼리비아 국영 에너지기업(YPFB)을 거쳐 판매, 유통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들은 볼리비아에서 추방된다.

지난 3월 베네수엘라의 유전 국유화에 이어 시행된 이번 볼리비아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조치로 '좌파 열풍'이 불고 있는 중남미 각국에서 주요산업 국유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남미 국가들 중 천연가스 매장량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에너지 부국이다.



앞서 지난 3월 말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광물자원 국유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는 외국기업이 참여한 32개 유전 개발사업에서 60%의 지분을 넘겨받아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거부한 프랑스의 토탈과 이탈리아의 에니 사에 대해서는 지분 몰수 결정이 내려졌다.

베네수엘라에 이은 볼리비아의 이번 에너지 국유화 조치로 최근 좌파 정권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중남미 각국에서 주요 산업 국유화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와 함께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의 대안(ALBA)'을 창립한 쿠바도 곧 국내 주요산업의 국유화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실시된 페루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한 좌파 오안타 우말라 후보는 오는 28일 실시되는 결선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중남미의 자원 민족주의 대열에 합류할 것을 공약한 상태다.

세계 7위 산유국인 멕시코의 행보도 주목된다. 오는 7월 열리는 대선에서 '좌파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시티 시장이 승리할 경우, 멕시코 역시 에너지 산업 국유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메이저 투자 감축 산유량 줄듯

석유와 천연가스 시설이 국유화되면 국제 에너지메이저 기업들의 투자가 대폭 줄어들어 당분간 생산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AP통신은 이번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시설 국유화 조치로 이 지역 천연가스 생산량이 당분간 평소의 18%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에너지전문 컨설턴트인 덴 립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남미 에너지 시장의 불안으로 최소 2008년까지는 유가가 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